

SKT “주민번호 유출無 …유출 정보만으로 금융자산 탈취 안 돼”

해킹 사태 소명… “주민번호 저장 서버 달라”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으로 막을 수 있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이 이뤄졌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이같이 해명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류정환 SK텔레콤 인프라전략기술CT담당은 “주민등록번호가 유

출되지 않은 게 확실하냐”고 묻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마케팅 서버에 있고, (유출된 가입자 유심 정보는) 네트워크 서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돼 있어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 메인 서버 해킹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서 ‘복제폰’으로 금융자산을 탈취하거나 전화·문자를 가로채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인증 문자를 받았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소비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 의원은 “본인도 SK텔레콤 가입자인데 이용하지 않는 금융서비스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자가 왔다”며 “상당히 위험한 금융거래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없어 복제폰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확실하냐”고 물었다.

이에 류 부사장은 “IMEI가 없으면 단말기 복제가 안된다”고 답했다.

불법 복제된 유심이 탑재된 휴대폰과 기존 휴대폰이 SK텔레콤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없었다”고 답했다.

스마트폰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가 켜진 경우, 복제 유심을 활용해 유심 주도권이 탈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으로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자산 탈취 우려와 관련해서는 “불법 복제된 유심이 있다 해도 금융자산 탈취는 이뤄질 수 없다”며 “불법 복제 유심을 단말기에 끼우면 유심보호서비스가 막아준다”고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했다. 유 사장은 “유심 보호서비스는 단말과 유심을 융접하는 효과”라며 “유심을 복제하더라도 (단말기와) 융접이 됐기 때문에 (복제폰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말기에 복제 유심을 넣어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동취재본부

SKT 해킹사태에 법적대응 시작 손해배상 소송·위자료 청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회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소 측은 이번 지급명령 신청이 집단소송 자체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하 변호사가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 본격적인 단체소송에 앞서 보다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소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막대한 유출 규모를 고려할 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 자격으로 먼저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며 “이번 지급명령 신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참여 의향을 밝힌 15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위한 본 집단소송은 이와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피드 외 로점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수임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2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배상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신난 경쟁사들…SKT 해킹 사태 속 ‘지나친 마케팅’ 논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마케팅을 펼친 일부 KT 대리점이 화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도하는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사례를 촬영한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KT 대리점은 매장 앞에 “SK 해킹”이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을 설치했고, 또 다른 매장은 유리 벽에 “SKT 유심 대란!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문구를 크게 내걸었다.

“SKT 고객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걱정되시죠? 기기와 번호 그대로, 통신사만 이동하셔서 저렴하게 이용하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을 붙인 매장도 있었다.

LG유플러스도 예외는 아니다.

한 LG유플러스 대리점은 “SKT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위

험이 심각해지고 있다. 유심 수급 지연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뒤늦은 해킹 사실 고지와 미흡한 후속 대응에 실망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순간 가입자 수는 3만2640명으로 집계됐다.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29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1만5608명이었으며, 같은날 SK텔레콤으로 유입된 인원은 3262명에 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로 바꿨다” 등 번호이동 후기를 올리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KT와 LG유플러스도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점을 언급하며 “3사가 다 똑같다” “제대로 된 통신사가 없다”고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합이 심각해지고 있다. 유심 수급 지연 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 변경을 권유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뒤늦은 해킹 사실 고지와 미흡한 후속 대응에 실망한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이탈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날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한 순간 가입자 수는 3만2640명으로 집계됐다. KT로 이동한 가입자가 2만294명, LG유플러스로 이동한 가입자가 1만5608명이었으며, 같은날 SK텔레콤으로 유입된 인원은 3262명에 그쳤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로 바꿨다” 등 번호이동 후기를 올리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KT와 LG유플러스도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점을 언급하며 “3사가 다 똑같다” “제대로 된 통신사가 없다”고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전남 나주시 왕건길 33-14	(061) 333-0805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